

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자금 233억원 지원확정

대기업·공공기관이 7,959억원 사주는 조건으로 중소기업 개발비 지원

▶ 문의 : 중소기업청 기술개발과(042-481-4441)

- 63개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구매(구매예상액 7,959억원)를 조건으로 국산화 및 신제품 개발을 수행할 109개 중소기업을 확정하고, 총 233억원의 연구개발(R&D) 자금을 지원한다.
- 중소기업청(청장 홍석우)은 「'08년 하반기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」에 참여할 109개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기술개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.
- 이번 기술개발 과제를 상용화하면, 개발을 의뢰한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직접 구매를 하기 때문에 선정된 중소기업은 개발단계부터 판로와 개발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.
 - ☞ 구매기관이 일정기간(2년이상) 구매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기술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성공하면 새로운 거래처가 확보되며,
 - ☞ 개발기간 2년 ~ 3년 이내에서, 최고 3억원에서 6억원까지 연구개발(R&D) 자금이 출연금으로 지원된다.
 - ☞ 개발에 따른 리스크가 최소화된 상태에서 연구개발이 진행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호응이 가장 높은 R&D사업이다.
- 이번에 선정된 중소기업의 구매기관은 63개이며, 109개의 개발과제에서 7,959억원의 구매발생이 예상된다.
 - ☞ 구매기관은 43개 대기업과 20개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, 개발과제는 대기업 64개, 공공기관 45개가 선정되었다.

〈 구매기관 및 개발과제 현황 〉

구매기관(개)			개발과제(개)		
대기업	공공기관	계	대기업	공공기관	계
43	20	63	64	45	109

- '0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기술개발을 마치고 상용화에 성공한 제품의 구매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

- ☞ 금년 6월말 조사결과, 29개 구매기관에서 1,235억 원의 구매가 이루어졌으며, 이는 정부지원금 대비 7배가 넘는 수준이다.

- 중소기업청은 대기업 참여와 중소기업 수요가 확대됨에 따라,
 - ☞ 연말까지 대기업과 함께 중소기업 기술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매칭형 “민·관 공동 R&D 펀드”를 조성하는 한편,
 - ☞ 내년부터 구매기관을 대기업 해외투자법인, 국외 조달기관 등 공신력 있는 해외 수요처까지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.

사업개요

- ☞ 구매기관의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국산화 및 신기술 제품개발 비용을 무담보·무이자로 지원
- ☞ 개발성공시 정부지원금의 일부를 납부하여야 하며, 개발이후 판로가 확보된 상태에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업

신청자격

- ☞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을 등록한 중소제조업체
- ☞ 다만, 아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공장등록 유무에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함
 - 소프트웨어, 공업디자인 서비스업
 - 중소제조업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
 - ①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업체
 - ②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
 - ③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고 사업장면적이 500㎡ 미만인 기업

지원내용

- ☞ 지원내용 : 총 사업비의 75% 이내 지원, 주관기업이 25% 부담
 - 일반과제 : 최고 3억원까지 지원, 개발기간 2년 이내
 - 투자연계과제 : 외부투자를 조건으로 6억원까지 지원, 개발기간 3년 이내



국가표준 개발·관리 민간이양 시작됐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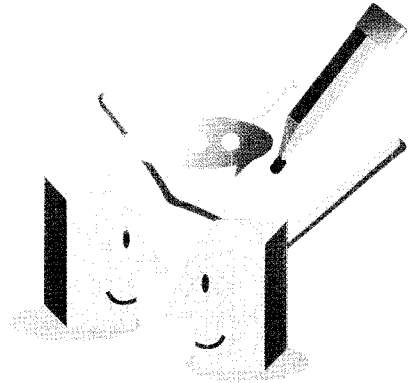
기술표준원은 표준개발협력기관 선정하여 국가표준에 대한 민간이양을 점차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.

▶ 문의 : 기술표준원 지식기반표준과(02-509-7058)

추진배경

- 최근 정보통신, 서비스 등의 표준이 대폭 증가하고 급격한 기술발전과 다양한 표준화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그간, 정부에서 담당하여 왔던 국가표준 개발·관리를 민간기관에서 전담한다.

※ 2000년에 비해 국가표준은 IT분야 3.3배, 식품 3.3배, 전기 2.6배, 항공 2.1배 증가



- 기술표준원(원장:남인석)은 정보통신기술협회,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4개 기관을 표준개발협력기관(COSD)으로 지정하고 정보통신, 전력설비 등 34개 전문기술 분야에서 1,900여종의 국가표준을 민간에게 이양한다고 밝혔다.

※ COSD : Co-operating Organization for Standards Development

- 이번에 지정되는 기관들은 기업, 소비자, 관련기관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조율이 가능하고 표준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·외 기술기준 및 표준을 담당하는 전문성이 인정되는 기관을 중심으로 선정하였다.

- 민간표준이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은 ASTM(재료시험협회), IEEE(전기전자기술자협회) 등 250여개 기관을 국가표준개발기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도입·운영 중이다.

※ 美(표준화기관인정제도, 250여개 기관), 日(특정표준화기관제도, 3개 기관)

향후 추진계획

- 표준개발협력기관 제도는 정부가 국가표준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수요자인 민간이 표준을 개발·관리하고 정부가 승인하는 방식으로 2012년까지 80%의 국가표준을 민간에 이양하게 된다.
 - ※ 국가표준 중 80% 이양 : 1단계(15%, '09년) → 2단계(40%, '10년) → 3단계(25%, '12년)
-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수렴 등을 통한 국가표준 제·개정(안) 개발 및 관리를 민간에서 담당하여 국가표준 개발에서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국가표준 행정처리 절차가 간소화(6단계 → 3단계)하게 된다.
 - ※ 신청 → 기술검토 → 초안개발 → 의견수렴(공청회) → 예고고시 → 심의·고시
 - ⇒ 신청 → 표준개발협력기관(기술검토, 초안개발, 의견수렴) → 예고고시 → 심의·고시
- 기표원은 표준개발협력기관을 발굴·육성하고 국제표준화(ISO/IEC) 대표기관이자 국가표준 총괄·조정 기관으로서 표준 정책·기획 및 국제표준화 등에 주력한다.

기대효과

- 우리나라의 양적 국가표준수(22,760종)는 국제수준이나 표준인력, 전문성 등에서는 선진국에 미흡한 편으로 민간 전문기관과 협력을 통하여 표준경쟁력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특히,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는 민간단체표준도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- 또한, 각 정부부처에서 운영하는 기술기준과 국가표준이 상이하거나 중복성이 높아 기업에게 이중규제로 인식되고, 유사한 기술기준을 여러 부처가 제·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 등의 문제점 제기도 있었다.
- 기표원은 이러한 기술기준을 관리하는 각 부처 산하기관, 협회 등을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도록 기술기준과 표준을 통일화하고 국가표준을 정부와 민간부문에 적극적으로 활용·확산하는 거점기관으로 활용할 계획이다.